

'전 당원 투표 저지' 법정 공방 벌여

〈국민의당〉

반대 측 "당헌상 근거 없는 전 당원 투표는 위법"… 당 법률위 "당무위는 최고 의결기구…결과 공표해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들이 통합 여부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 저지를 위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오전 통합 반대 측이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 당원들의 모임 '나쁜선거거부운동본부(본부)'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허기

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부 측 대리인은 "당원 요구 없이 당무위원회(당무위)가 의결한 전 당원 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반약 실시되더라도 당규에 따라 3분의 1의 의결 정족수를 넘지 않으면 개표와 공표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신청인들의 이해 특성에 따른 주장"이라며 "당원이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결과를 공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당무위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본부 측 대리인은 "당무위는 집행기관, 의결기관은 중앙위원회와 전당대회에 해당하는데 피신청인은 당무위가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위 측은 당헌을 근거로 당무위가 당무 집행의 최고 의결기관이 맞다고 강조했다. 당헌 24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무위에 의결 권한이 있으며 당무위

의 구성 인원(100인 이내)이 중앙위(800인 이내)보다 한정된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위 측은 "항후 합당에 대해서도 전 당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전 당대회 뒤 후속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며 당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면서 "사실상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단되는 대로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종결했다. /뉴시스

'전 당원 투표'는 나쁜투표

전북 광역·기초의원 거부 선언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일부 전북 광역·기초의원들이 전 당원 투표를 나쁜투표로 규정하고 거부 선언을 했다.

26일 국민의당 도의원과 일부 시군 의원 58명 중 27명은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보수세력과 야합을 위한 나쁜투표를 전면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밀어붙이는 투표가 나쁜투표인 이유는 당헌당규를 위배하고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것으로 정당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한 대표 측근들이 장악한 중앙당의 패권이 작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내용에 대해 당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투표의 주요 사인인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원을 찬성과 반대로 불로 쪼개는 투표를 거부한다"며 "당내 다수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주장하는 한 대표는 대다수의 호남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26일 전북지역 국민의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당 대표와 그 측근들이 장악한 당무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전 당원투표는 나쁜투표이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 자신의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가 맡는다.

예초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맡는다. 그러나 형사합의1부 재판장인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는 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같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 둘은 또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이 같다. 이 같은 점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합의1부 대리재판부인 형사합의2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뉴시스

靑 "개헌, 시대적 사명... 지방선거 때 투표해야"

청와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우리의 공약사항이자,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개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관련해선 "그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이 발의되고 처리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文대통령 지지율 69.9%... 1.3%p ↑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2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6일 발표된 12월3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8%)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대비 0.6% 감소한 25.1%(매우 잘못 13.0%·잘못하는 편 11.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0%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68.6%) 보다 1.3%p 상승 11월4주차(73.0%) 이후 3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췄다. 60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 재진입을 바라보게 됐다.

이처럼 소폭이나마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배경으로는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허브 화재 당시 이틀날 현장을 방문한 것이 꼽힌다.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집트(이집트) 방문 의혹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공방 때 다소 주춤했다. 21일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이 5.6%p 오른 75.5%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광주·전라(82.8%→84.7%·1.9%p ↑), 서울(68.8%→70.0%·1.8%p ↑), 경기·인천(70.9%→72.4%·1.5%p ↑), 대구·경북(54.1%→55.3%·1.2%p ↑)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65.7%→64.3%·1.4%p ↓)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50대(56.3%→61.8%·5.5%p ↑)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40대(79.1%→82.7%·3.6%p ↑), 30대(83.5%→86.2%·2.7%p ↑)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50.8%→46.5%·4.3%p ↓)에서 하락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0.1%p 오른 52.0%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17.8%)·바른정당(5.7%)·정의당(5.2%)·국민의당(4.9%)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얼빠진' 영동군의회... 참사 외면, 전주서 '술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빚어져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영동군의회가 전주까지 찾아가 대담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26일 26회 영동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마친 뒤 오전 11시경 군의 대형버스를 이용해 전북 전주 한옥마을로 떠났다.

군의회는 군의 대형버스를 배차내면서 '의원과 직원 전북 고창 선진지 견학'이라고 적고, 의회동 사무실을 모두 걸어 잠근 채 떠났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군의원 등은 전북 고창으로 가지 않고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미리 예약해 둔 A 한식집을 찾아 점심식사를 했다.

1인당 3만원짜리 식사를 하며 소주와 맥주 등도 곁들였다. 이렇게 오후 1시30분까지 먹고 마신 음식값과 술값만 73만여원이 나왔고 이 자리는 오후 2시가 되도록 더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에서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빚어진 상황에서 대담 술판을 벌일 수 있는 비난이 일고 있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금액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